

지방시대 매거진

Vol 125

전북특별자치도

Vol
125

2025. 01

지방시대 매거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새만금방조제



발행일 2025년 1월 10일(제125호)
발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소 03186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02-2170-6092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전북특별자치도

Vol. 125
2025. 1.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지방분권 테스트베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끈다

2025년 역점과제

- ▶ 모두의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 ▶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 ▶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정보

- ▶ 몸과 마음 ‘섬’이 있는 전북 치유관광지
- ▶ 전북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사례

- ▶ 김제시, 미래 산업을 이끌 특장차 클러스터 집중 육성
- ▶ 임실군, 전국 최초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
- ▶ 고창군, 지역농촌 3대 현안과제(일손, 소득, 복지) 해결
- ▶ 무주군, 특별한 상상력과 영감을 키우는 상상반디숲
- ▶ “한국의 샤모니” 장수군, 국제 산악관광의 메카로 부상을 꿈꾸다

의회소식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 ▶ 의회 권한 강화, 국회 차원 입법 요청
- ▶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이 최적지다
- ▶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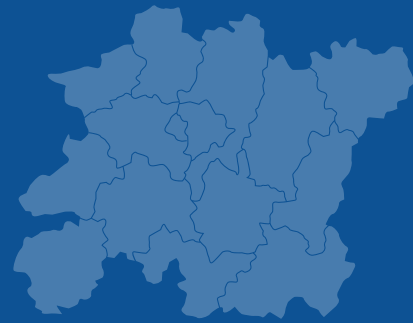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백광산업 장영수 대표

정책포커스

- ▶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지역인재혁명
- ▶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체계의 합리화 방안





시도지사 칼럼

지방분권 테스트베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칼럼

지방분권 테스트베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끈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기업, 청소년, 인프라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예산을 충분히 이양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닌,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전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라북도도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하던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지자체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한 이래 전국 최초의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미래첨단·문화관광·고령친화·농생명·민생특화 등 5대 분야에서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출범 1주년을 맞아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여러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민구 확대라는 지방소멸 대응의 중점 과제를 실험하는 '지방분권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전북 경제의 르네상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 유치다.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다. 중앙정부도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 고용지원금 등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이주는 여전히 미흡하다. 중앙정부는 권한에 기반한 인센티브만을 제공했을 뿐, 기업들이 지방의 특성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는 권한과 자금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한다면, 지방은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장점을 활용해 스스로 기업 유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1의 도정 목표로 삼아 드넓은 새만금 부지를 강점으로 제시하며 기업 유치에 주력했고, 그 결과 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전북의 강점과 규제 완화를 결합해 기업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4곳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탄소융·복합, 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은 특구에서 입지와 형태, 업종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지역 주도형 경제모형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기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특화형 기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전북의 우수 기업들을 전세계 한상들에게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북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처럼 전북은 권한이 이양됐을 때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스스로 부흥할 능력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여기에 기업 이전 비용을 보조할 재정까지 추가로 확보되면 기업 유치의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 도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살고 싶은 전북

그러나 경제 영역에서의 지방분권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규모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도 정착할 사람이 없다면, 지역은 그저 일터에 불과할 뿐 결국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착을 원하는 수요를 반영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일이 지역의 요구를 듣고 개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중앙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의 몫이다. 개별 지자체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파악해 정책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저출생 대책이 대표적이다. 전북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주거·일자리, 임신·출산·양육, 일·가정양립 등 주요 저출생 대응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하고, 지방의 강점인 주민접근성을 살려 세미나·포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를 통해 최근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패키지인 ‘청년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청년,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 등 생애주기별 수요맞춤형 정책들을 제시했다.

특히 임대료를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출산 시 주택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반할주택’ 공급,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상향 지급,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전북청년함성 패키지 확대 등 정책들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수립한 것들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북 청년만이 아닌 타지에서 이주하는 청년들에게까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정주인구를 확대하고, 증가한 청년 인구로부터 다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지방자치 30주년, 신뢰가 건인하는 지방분권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을 당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들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데 신중했다. 중앙의 통제가 필요했던 시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자체들은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전문성을 길러왔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신뢰하고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줄 때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지자체는 이제 성숙한 ‘성인’과도 같다.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감 있게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능력을 인정해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이끌어야 한다.

전북이 선도하는 지방분권, 반영하는 대한민국

지방분권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려면 지방과 중앙 간 권한과 자원이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북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강화된 자치권을 통해 혁신적 정책을 실행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통해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우리만의 생존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완주-전주통합, 특례시 승격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소규모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며, 광역시가 없는 한계점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2025년 전북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나간다. 지방간의 연대를 통해서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를 추진할 것이다. 지방연대를 통한 올림픽 유치라는 국내 최초의 도전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지방이 새로운 성과를 이뤄내고 각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 국가 전체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된다. 전북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도민 모두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년 역점과제

모두의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 조성



모두의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 전주 올림픽 유치 도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1일 2036 하계 전주 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하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올림픽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의 2036 올림픽 비전은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으로 천년고도 전북의 전통·문화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핵심 콘셉트는 3S, 4W로 3S는 효율성(Smart Digital),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사회적 화합(Society Together)이며 4W는 경기 인프라(HardWare), 문화 콘텐츠(SoftWare), IT 혁신(SmartWare),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연대(HumanWare)이다.

또한, 전북은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세계 최초의 RE100 탄소중립

올림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제로 플라스틱 정책, 무공해 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올림픽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지구촌 최대의 축제를 활용한 탄소중립 확산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계획이다.

경기장은 도심, 해양, 산악 지역에 3개의 스포츠 콤플렉스를 분산 배치하고,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태권도원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인근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대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야외 경기종목은 전북의 풍부한 해양·산악 자원을 배경으로 친환경 목조 임시경기장을 신설 활용해 올림픽 대회 이후 불필요한 유지비용은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IOC 개최도시 협약서를 준수하여 기존 호텔과 대학교 생활관, 시니어 레지던스를 활용해 4만 명의 주요 관계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 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제시하며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세제 혜택과 함께 새만금 고용특구를 설계하여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유치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6월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에서 탄소소재, 바이오,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며 약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첨단산업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R&D, 인력 양성,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 투자기업 전담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특수 시책인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도입해 14개 시군 2,797개 기업이 참여하며, 기업의 필요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투자협약 기업들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력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新 노사정 상생공동선언”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전북은 전국 최초로 삼성과 14개 시군, 삼성CEO포럼과 협력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2026년까지 30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며, 2025년에는 총 2,7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 : 전북 창업·벤처펀드 누적 1조 달성



“지역 혁신의 힘은 창업기업에서 나온다”라는 신념으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때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1조 창업펀드,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창업인프라 구축, 수도권의 창업지원기관과 VC, AC를 아우르는 창업 네트워크 구축, 해외스타트업 유치 등 여러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술창업자들에게 자금 걱정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 조성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약품 등 탄탄한 그린바이오 기반을 바탕으로 농식품 기능성 소재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등 146만 종의 데이터를 활용해 레드바이오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9년까지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육성 펀드를 결성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분야의 선도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025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메카노바이오 연구인력과 의사과학자 등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KIST유립연구소에서 바이오기술협력센터 개소와 석박사 협력과정 설치,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수행 중이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하버드와 MIT 등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9.6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자리 잡았다. 새만금은 10만평 이상의 단일부지 제공,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인프라 조성, RE100 달성, 투자진흥 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100% 감면 등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최적지이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디지털 트윈 기반 재자원화 센터 등 공모 선정으로 첨단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배터리아카데미」 등 전문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생태계 고도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완주에 조성을 준비 중인 50만 평 규모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139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히며 기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폐연료전지 시험·인증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25년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하여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 융복합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및 민·관·산·학·연 협력 체계인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국가적 아젠다 발굴·기획, 혁신 인프라 연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종합 플랫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대응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다.



첨단소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기반 강화



새만금 부지 내 드론 및 대(對)드론 등 첨단기술 중심의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방위사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소재 R&D와 발사체 구조체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등 탄소소재의 강점을 활용한 첨단소재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방산학과를 전북대학교에 신설하고 첨단소재분야 국방특화연구센터를 유치하여 미래 전북에 입지할 방산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에 노력할 것이며, 기업간 거버넌스 구축 및 방위사업청 원스톱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방산기업을 육성하고 도외 체계종합기업을 유치, 전북자치도에 특화된 방산 연구기관·기업 집적화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정보

몸과 마음 ‘쉼’이 있는 전북 치유관광지
전북의 축제



몸과 마음 ‘쉼’이 있는 전북 치유관광지

(진안 홍삼스파) 2017년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진안 홍삼스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 목적형 스파시설을 갖춘 곳으로 국내 유일 홍삼 한방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과 가족들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양오행 테라피, 홍삼버블체험, 마이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노천탕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완주 아원고택) 2024년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아원고택은 완주군 소양면 종남산 산자락 아래 경남 진주의 250년된 고택을 이축한 한옥으로 미술관과 카페, 한옥스테이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원고택의 외관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같은 풍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도 유명하다.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카페에서 전통차를 즐기고, 한옥에서 건강수면을 체험할 수 있다.



(무주 태권도원) 2022년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태권도원은 청정자연 속 태권도 수련으로 몸과 마음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힐링 태권체조, 태권도 수련명상, 태권힐링테라피 등 태권도를 연계한 한국만의 동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망대와 모노레일 등 무주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객실과 숙박 공간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순창 실랜드) 2024년 한국관광공사 우수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순창 실랜드는 자연과 건강을 테마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실랜드의 숲길을 따라 산책하며 자연 속에서 푸르른 나무들과 새소리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요가, 명상, 아로마 테라피, 찜질방, 고추장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과 편백 방갈로, 객실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몸과 마음 ‘쉼’이 있는 전북 치유관광지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축제 현황 〉

시군	시기	축제명	시군	시기	축제명
전주시	10월경	전주비빔밥축제	진안군	10월경	진안홍삼축제
군산시	10월경	군산시간여행축제	무주군	9월경	무주반딧불축제
익산시	5월경	익산서동축제	장수군	9월경	레드푸드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정읍시	10월경	정읍구절초꽃축제	임실군	10월경	임실N치즈축제
남원시	10월경	남원홍부제	순창군	10월경	순창장류축제
김제시	9월경	김제지평선축제	고창군	10월경	고창모양성제
완주군	9월경	완주와일드엔로컬푸드축제	부안군	5월경	부안마실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일제강점기 민중의 항거와 치열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 군산을 중심으로 군산의 과거, 현재,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축제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퍼레이드와 퍼포먼스 경연대회 및 근대군산의 역사적 스토리를 담은 군산 대한독립만세 미션게임 등이 진행된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공연, 체험, 7080 추억의 놀거리와 먹거리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된다.



(김제지평선축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중 유일하게 전통농경문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最大) 수리시설인 김제 벼골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평선을 무대로 개최되는 대통령배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아궁이 쌀밥 짓기, 메뚜기 잡기, 벼 베기 체험 등 각종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벼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등 전통행사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임실N치즈축제) 대한민국 유일의 치즈 테마 축제로, 지역 특산물인 치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음식 축제가 열린다.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와 치즈 만들기 체험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고창모양성제) 고창모양성제는 국내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모양성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이다. 대표프로그램은 답성놀이로서 한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바퀴돌면 극락승천 한다는 전설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이 외에도, 답성놀이와 강강술래를 혼합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아간담성강강술래달밤, 과거현재 미래를 표현한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과거로의 여행을 주제로 하여 고창읍성 내부를 누비며 즐길 수 있는 뽕투더1453, 그리고 고창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사례

김제시, 미래 산업을 이끌 특장차 클러스터 집중 육성
 임실군, 전국 최초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
 고창군, 지역농촌 3대 현안과제(일손, 소득, 복지) 해결
 무주군, 특별한 상상력과 영감을 키우는 상상반디숲
 “한국의 샤모니” 장수군, 국제 산악관광의 메카로 부상을 꿈꾸다



김제시, 미래 산업을 이끌 특장차 클러스터 집중 육성

김제시는 특장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특장차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제2단지에는 특장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원스톱 검사지원센터, 혁신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특장차 안전성 향상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R&D와 기업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김제시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특장차산업의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임실군, 전국 최초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

임실군은 관내 유제품을 유·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유제품 공급망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임실은 대한민국 치즈 산업의 발상지로,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치즈와 유제품을 학교 급식에 포함시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임실군은 치즈농협과 협력하여 파우치 요거트, 스트링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주 2회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주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임실 유가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투자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 지역농촌 3대 현안과제(일손, 소득, 복지) 해결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와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를 설립해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는 72%에 달한다. 또한, 고창군은 2023년 8월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과 근로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을 운영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한다.

더불어, 고창군은 '농촌협약' 사업을 통해 인구소멸, 복지, 교통 등 농촌 현안문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순유입 인구와 생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 특별한 상상력과 영감을 키우는 상상반디숲

2024년 5월, 무주군에 개관한 '무주 상상반디숲'은 책과 자연, 반딧불이를 모티브로 한 복합문화시설이다. 4,686㎡ 규모의 이 공간은 무주군형설지공도서관, 무주군가족센터, 생활문화어울림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민 및 방문객의 문화 교류를 돕고 있다. 상상반디숲은 무주의 자연과 전통을 반영한 곡선형 지붕 디자인으로, 최북미술관과 김한태문학관 등과 함께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상상력과 영감을 키우는 특별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의 샤모니” 장수군, 국제 산악관광의 메카로 부상을 꿈꾸다

장수군의 “장수트레일레이스”는 2022년 첫 개최 이후 국내외 이목을 끌며 성장하고 있다. 올해 개최된 「제3회 장수트레일레이스」에는 해외 13개국의 선수와 1,200여 명이 장수의 산을 달렸다.

특히, 장수군은 2024년 국토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0대 명산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BYN 블랙야크와 손을 맞잡게 되었다. 총 110억 원 규모의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 최장거리 메타세쿼이아 산악길, 산악자전거길 등 산악 레저분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장수트레일빌리지 사업”이 2023년 행안부 로컬브랜딩사업과 2024년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트레일스트리트, 힐링스테이션 등을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회소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의회 권한 강화, 국회 차원 입법 요청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이 최적지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제41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갈 의장은 문승우(군산4)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이명연(전주10) 의원과 김희수(전주6) 의원이 맡았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기획행정위원장에 최형열(전주5) 의원, 농업복지환경위원장에 임승식(정읍1) 의원, 경제산업건설위원장에 김대중(익산1) 의원, 문화안전소방위원장에 박정규(임실) 의원, 교육위원장에 진형석(전주2) 의원이 선출됐다. 문승우 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에 기대가 큰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 행복한 전북인의 삶을 위해 3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 권한 강화, 국회 차원 입법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신정훈 행안 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 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 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 및 민생 법안 처리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정책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이 최적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0월 2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규모가 166만㎡에 이르고 100% 유희 국공유지”라며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와 KTX·SRT 고속전철,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남원 부지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지”라며 “영호남, 지방과 수도권,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소멸위기의 지역이 소생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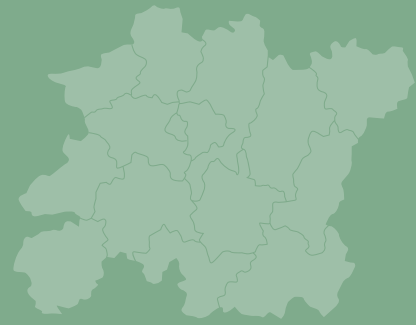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군산4) 의장은 지난 10월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이는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키로 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문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만 촉구하는 정부의 ‘땀질식 처방’을 비판한 뒤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지역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백광산업 장영수 대표
김도균(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19기)



간단한 자기소개 및 기업 소개



안녕하세요 백광산업 대표이사 장영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54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초화학 소재인 가성소다, 염소, 염산, 차염산나트륨, 수소 등을 만들고요 이게 다시 당하고 합쳐서 솔비톨, 말티톨 등 그러니까 인슐린 비의존성 당류를 만들어 치약, 제약, 어린이들 과자나 제과 같은데 사용하는 제품들도 만듭니다. 그리고 한 14년 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기초화학 소재인 고순도 염소를 개발하였고, 그전까지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제품을 독자 생산해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공급해 국내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품질혁신을 통해서 일본을 능가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것저것 하다보니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인 아산화질소(N_2O)를 생산하게 돼서 이것 또한 증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고순도 염화수소 또한 일본에 전량 의존하던 제품인데 2021년 국산화 개발후 국내 30% 정도 공급 중이고 증설을 통해서 3년 내에 국내 80%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순도 염산도 설비를 군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품과 기술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회사가 설립된 1954년 초기에는 국내에 기초화학 제품의 생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성소다, 염소, 염산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수입이 돼 왔었고요 과거에는 철강이나 석유 이런 것들이 미래와 관련된 기초소재였다고 본다면 앞으로 갈수록 반도체나, 2차전지, 디스플레이 관련 아주 세밀하고 특별한 소재들이 결국 미래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의 국산화가 산업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소재의 국산화가 아니고 첫째는 새로운 소재, 신소재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 대체품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 발전에 따라 신규개발이 필요한 신소재, 미래소재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점소재, 그러니까 해외에서 배터리 소재 중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100% 독점하고 있는데 그 핵심 소재들을 우리가 군산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반도체 부분도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소재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절감과 관련된 리사이클링 소재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쪽에는 신소재도 하고 수입대체도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소재 등을 개발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 글로벌 기초화학 소재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겠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심볼을 퍼스트펭귄으로 했습니다. 퍼스트 펭귄은 펭귄 무리에서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으로 범고래 바다표범과 같은 천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하는 위험한 상황에도 물속에 먼저 뛰어드는

선구자를 의미합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펭귄의 참여와 도전을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의미를 담아 백광산업은 퍼스트펭귄을 모티브로 회사의 심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내년에 주총을 통해서 백광산업의 이름을 PKC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P는 Pioneer, 선구자라는 뜻이고요 K는 Knowledge, 첨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소재를 개발하겠다. C는 Collaboration, 내부 직원, 고객들, 산·학·연과의 협력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겠다. 이것이 우리 PKC의 사명이 될것입니다.

군산에 본사를 두신 이유가 있는지?

군산에 본사를 두게 된 결정적 계기는 새만금 때문입니다. 우선 군산에는 국가국가산업단지가 있어 그곳에 수요처가 있었고요, 그 일대로 새만금산업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있어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저희 모든 역량을 그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3만 2천 평 그리고 10만 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새만금 기업 중 가장 크게 부지를 확보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2차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드는데 3만 2천 평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등을 만드는데 10만 평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인 목표와, 회사 목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에 3만 2천 평 부지를 배터리 관련 소재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2028년까지 약 3천억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7천 5백억 규모 투자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1조 500억 규모를 투자해서 매출 1조 5천억을 달성하는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미래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을 대폭 늘려서 앞으로 소재와 관련된 글로벌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자들에게 한 마디

지방시대에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이 잡지를 보고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도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포커스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지역인재혁명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체계의 합리화 방안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지역인재혁명

지난 11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남일보 주최로 ‘지역인재혁명포럼’이 열렸다. 영남일보에서는 ‘인재가 지역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연초부터 1년 동안 연중 시리즈로 보도를 해왔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청년유출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역인재혁명’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여기서 혁명(革命)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급박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고질적인 난제(難題)라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이중혁명’으로 인해 서구 사회에는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중혁명’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있었던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은 서구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에 비견되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을 모두 이루고 최단기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다져졌다면, 19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전국적 저항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다음 사회’를 열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의 실체에서 궁극적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복잡한 난제가 되어버린 청년유출과 지방소멸,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위기다. 바로 ‘지역인재혁명’이 이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이 될 것이다. 이는 지역혁명과 인재혁명이 상호 촉발하고 뒷받침하는 ‘이중혁명’을 이룬다.

‘지역인재혁명’의 필요성은 지역과 인재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청년인구(19세~34세)는 1,044만 명으로 그중 565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국토의 11.87%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청년 인구의 54%가 몰려있는 심각한 인구 포화 상태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유입된 20대만 60만 명 수준이다.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2년 4곳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던 소멸 위험지역이 2024년 3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130곳으로 57.0%에 이르렀다. 소멸위험지역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재의 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계속 떨어졌는데 2023년은 0.72명이었다. 올해 출산율은 0.74명으로 9년 만에 반등 조짐이 있지만,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2월 24일 20.0%를 돌파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후 7년 4개월 만에 한국은 초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프랑스는 29년, 일본은 10년 걸렸다.

‘지역인재혁명포럼’에서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인구 오너스 vs 인재 보너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제는 모든 인구를 인재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동집약적 고성장 경제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다음 성장 모델로 ‘로컬리즘’을 꺼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혁신 인재 유입을 위한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의 방향으로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공간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산업이 선호하는 입지로서 고밀도, 다양성, 네트워크의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는 ‘지역인재혁명포럼’ 당일 종합토론 ‘좌장’으로 참여하였다. 제한된 시간과 역할로 인해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제언을 본 지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양상은 표면적으로 지역과 인재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위기를 초래한 요인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서울대의 인구학연구실(조영태 교수)과 인간본성·생철학연구실(장대익 교수) 공동연구팀은 “서울 집중이 초저출산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인구편중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은 서울의 과밀 때문이라고 한다.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공통점은 모든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으로 인해서 후손 재생산 본능보다 생존본능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낮았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서울로 집중하니, 서울의 집값은 더욱더 올라간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다. “지방에는 먹이(일자리)가 없어서 알을 못 낳고, 서울에 가니 동지(집)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경기도에서 집을 겨우 구하면, 서울로 긴 통근 시간에 시달리며 삶이 팍팍해진다. 그래서 GTX 노선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서남북을 6개 노선으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국비 30조 원 등 총 133조 원 규모다. GTX 노선이 확충되면 수도권 쓸림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의 청년들은 또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의 활력은 떨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된다.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인구이동을 고려하여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활동과 귀환(歸還)을 국가에서 투자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인적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첫 번째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대도시권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대도시권이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인구 댐’이라 할 수 있는 광역시도 소멸 위험의 적색등이 켜졌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45개 구·군 중 소멸 위험 구·군은 21개로 46.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곳, 대전 2곳, 인천 1곳으로 확인되었다. 지방 광역시에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거점 대도시권 차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에 의해 처음 제안된 ‘참여소득’은 사회적 배당이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앳킨슨은 참여를 노동시장 참여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교육, 훈련, 고령자 또는 장애인 돌봄, 승인된 자발적 임무 등을 포함했다. 청년들의 지역공동체 참여 활동은 중·장년, 외국인 등 지역 모든 인재의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인재의 공급과 활용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 지방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공급 역할에 충실했다. 서울에 유학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사(學舍)만 8개다. 이제는 수도권에서 거주

하다가 돌아오는 U턴, 수도권 출신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I턴, 그리고 외국인 인재가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신입보다는 경력직 청년들을 선호하는 지방의 노동시장 특성과도 부합되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청년 귀환(歸還)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과 주거에 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청년들의 지속적인 귀환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¹⁾, 한국지방행정연구원²⁾의 연구 결과에서도 수도권 청년 10명 중 5~6명의 청년이 지방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응답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들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산업단지의 경제성보다 정주여건의 매력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선진 도시들은 ‘장소기반의 혁신(place based innovation)’과 ‘인재기반의 혁신(people based innovation)’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만 있으면 사람이 오던 산업화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인재가 기업을 키우고, 인재가 기업을 만들며, 인재가 기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청년들이 나의 성장, 일의 성공, 삶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재가 지역을 바꾸는 ‘지역인재혁명’만이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다.

1) 「수도권 청년의 지방 이주 정착과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구경북연구원, 2020년 12월

2) 「인구감소 대응 지자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12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체계의 합리화 방안¹⁾

I. 들어가며

국고보조사업이란 뚜렷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재정상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맥락에서 일정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경쟁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이라 칭한다.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지방정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공모과정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경쟁을 통한 이점을 취하고자 하는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선정사업의 수도권 집중, 지방비 과다 부담, 사업 선정 기준의 모호성 및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낭비 등 실제 운영상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정삼철·류남훈, 2014; 이재원, 2015; 권오성, 2016; 이재원 외, 2021 등). 이로 인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즉,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선정단계, 집행단계, 평가 및 환류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운영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단계별 쟁점

1. 개요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국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이다.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책임성 강화 및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0월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의 명확화와 선정 투명성 확보 여부이다.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선정기준은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①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②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③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정기준은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2022년에 수행된 대형 공모사업 10개를 선정하여 선정 시 사용한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대형 사업일수록 입지여건의 적합성과 지방정부의 자원조달과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두 가지 쟁점을 불러일으킨다. 첫째는 입지여건 즉, 인프라를 확보된 곳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선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방정부의 지원, 부지 등 재정적 부담이 주요 평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건수 및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비율을 살펴보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서울이 절대적 사업 시행 수도 가장 많았다. 전체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사업 비율 또한 수도권인 서울(2018년 13.24%, 2019년 10.63%)과 인천(2018년 7.36%, 2019년 8.11%)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운영단계별 주요 쟁점

첫째,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모사업 선정의 적절성과 선정 시기의 적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모사업 선정 적절성은 실제로 해당 사업이 공모형 사업으로 적합한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세부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모를 실시하는지 알 수 없다. 시기 적정성이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명할 수 있다. 회계연도 내에서 공모 시기가 늦춰질수록 공모 사업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불용액 증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은 평가지표의 적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평가지표가 활용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환류 과정으로 연결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질과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공모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어려움, 실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토 미비 및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문제가 된다. 먼저 공모형 사업은 다양한 중앙부처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처별로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동일 부처라도 사업마다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투입해야 하는 자원과 인력이 상당히 소모적일 수 있다. 또한 공모사업은 반드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분이 있기때문에 예산부서와의 사전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부서 입장에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이 하나의 성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산부서와의 협의 없이 일단 공모 선정을 목표로 하고 사후에 알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두 부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 수립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넷째, 국고보조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의 부담 정도를 두고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앙부처별로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며, 선정 기준 자체도 자부담 비율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력이나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공모사업 자체를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가운데, 계획되지 않았던 공모사업의 자부담 보조금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1) 이 원고는 이서희 외(20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Ⅲ.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은 수도권 집중 선정, 지방비 과다 부담, 사업 선정 기준의 모호성,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 낭비, 적절한 평가지표와 환류장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체계를 개선하여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공고 당시 50%:50%의 매칭 비율일지라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의 지방비 부담을 위한 개선이 요구되며, 단순히 지방비를 더 높게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재원분담 중심의 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와 같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적합성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실제로 공모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고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사업의 절차상 투명성이 요구되며, 시범사업 성격이 강할 때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선정의 적합성을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적 공모방식의 확립을 위해 공모사업 운영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 자본적, 경상적, 행사성 보조금으로 구분하듯, 국가공모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공모에 대하여 자본적 공모, 경상적 공모, 행사성 공모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모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자체사업, 일반보조사업 외 공모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별 공모사업 건수 및 예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내 공모사업 추진토록 총량제 도입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성. (2016).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85-110.
이서희·문소영·홍근석. (2022).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6(2): 81-121.
이재원. (201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 1-34.
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6(1): 117-151.
정삼철·류남훈. (2014). 정부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전략 모색. 충북 FOCUS, (95): 1-27.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1월호는 '전북특별자치도'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김관영 도지사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5년 역점과제」로는 「모두의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기업하기 더 좋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 조성」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사례」에서는 「김제시, 미래 산업을 이끌 특장차 클러스터 집중 육성」, 「임실군, 전국 최초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지원」, 「고창군, 지역농촌 3대 현안과제(일손, 소득, 복지)해결」, 「무주군, 특별한 상상력과 영감을 키우는 상상반디숲」, 「“한국의 샤모니” 장수군, 국제 산악관광의 메카로 부상을 꿈꾸다」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 돌입」, 「의회 권한 강화, 국회 차원 입법 요청」,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이 최적지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소개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14년 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기초화학 소재인 고순도 염소를 개발하여 국내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백광산업 장영수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지역인재혁명”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5년 2월호는 '인천광역시'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지방자치분권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지역균형발전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지방외교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지방시대 매거진

설문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교촌 반반콤보+웨지감자세트 (15명)



이*정(8980)	김*하(8926)	임*영(8323)	안*섭(5294)	한*미(7821)
정*진(2640)	방*태(8862)	김*권(6701)	배*영(5890)	김*주(0290)
김*울(3417)	이*수(5752)	임*규(9701)	최*길(2790)	정*경(2123)

파리바게트 실키롤케이크 (20명)



주*혜(4608)	류*필(0521)	박*정(0146)	이*선(8494)	유*환(4003)
김*영(8074)	이*영(6177)	김*원(6701)	윤*기(5354)	박*호(1145)
강*(7900)	박*(0701)	김*민(2477)	이*호(8407)	신*이(3882)
노*빈(5750)	백*지(8130)	김*오(6528)	김*연(8494)	이*자(7719)

요아정 입짧은 해님 세트 (20명)



오*민(6212)	오*경(0650)	이*국(6559)	강*정(2259)	김*민(9807)
원*환(2570)	이*지(4904)	고*주(0920)	이*근(8559)	신*철(2955)
고*래(8115)	윤*인(9165)	정*진(6013)	이*영(6610)	이*원(8933)
유*민(5817)	모*오(8629)	이*수(8933)	박*나(5588)	양*정(4712)

크리스피크림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20명)



조*남(6422)	박*주(1277)	양*훈(3230)	최*진(3654)	강*승(2581)
조*필(7076)	이*섭(6420)	정*진(9569)	이*영(3915)	박*수(0067)
김*순(2907)	진*이(7294)	이*용(5761)	김*옥(4148)	김*주(4148)
이*연(6733)	안*호(9548)	김*정(1537)	표*천(2877)	박*미(7986)

다이소상품권 1만원권 (25명)



정*환(2645)	임*영(3923)	고*현(7385)	이*현(8420)	안*연(2081)
김*석(5780)	김*유(2243)	나*태(5529)	최*열(6459)	정*영(1471)
최*자(2381)	윤*욱(9587)	이*욱(5938)	전*훈(2363)	장*지(1236)
이*원(5205)	최*홍(6963)	김*표(5415)	정*주(2488)	이*명(1136)
이*건(2345)	이*민(8933)	김*섭(3278)	이*오(8958)	김*철(9685)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50명)



김*홍(0466)	최*일(0502)	위*현(5636)	박*석(8823)	정*영(7539)
최*훈(8014)	유*순(8824)	최*익(2321)	이*원(0077)	박*훈(8873)
안*언(2416)	김*희(3605)	이*정(1933)	이*선(4155)	양*일(2445)
정*오(0722)	유*영(1471)	유*열(6617)	김*중(0850)	유*수(4088)
박*은(1387)	최*희(0923)	최*혁(9608)	김*국(5387)	윤*빈(7343)
윤*빈(1343)	김*수(1359)	김*늘(8808)	이*(2022)	이*호(8771)
서*정(7409)	박*환(2521)	김*애(1209)	정*순(7944)	이*훈(1023)
장*영(0434)	채*(7705)	김*수(1177)	이*선(5415)	임*연(3940)
정*수(9772)	권*식(9057)	한*람(2502)	이*정(8361)	문*나(2999)
김*우(5832)	백*윤(4148)	정*현(3541)	조*린(1608)	김*하(5825)